

# ‘국산 둔갑’ 수입쌀 600% 폭증

작년 63건, 203.8톤 부정유통 적발돼... 2020년부터 대비 증가  
민주 윤준병 의원 “국내 쌀값 형성 악영향 주는 시장 교란 행위”

최근 5년간 수입쌀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된 부정유통 물량이 무려 600%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 불안정과 수급 혼란을 틈타 값싼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내 양곡시장의 신뢰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경우 63건, 203.8톤의 수입쌀 및 가공용수입쌀이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상태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적발된 수입쌀 부정유통은 총 374건, 1,117.2톤에 달했다. 피해액만도 30억5,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63건, 203.8톤의 수입쌀 및 가공용수입쌀이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상태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 2020년 대비 600% 폭증한 수치로, 부정유통 적발 건수와 손해액 또한 각각 70.3%, 138.6% 증가했다.

부정유통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가 전체의 98%(271건, 1,104톤)로 압도적이었고, 표시 누락(미표시)은 103건(13톤)에 그쳤다. 용도별로는 가공용 수입쌀 867.5톤, 밥쌀용 수입쌀 249.7톤이 적발됐다.

윤 의원은 “쌀값이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은 단순한

표시 위반이 아니라 국내 쌀값 형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심각한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정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부는 수급 대책과 별개로 수입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 부정업체에 대해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밥상에 오르는 쌀 한 톨의 진실을 지키는 일은 국민의 건강과 농민의 생존을 함께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가 원산지 표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수입쌀 유통 전 과정의 추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 “부동산 범죄 강력 대처할 것”

김윤덕 국토부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모두발언서



전북 출신인 김 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일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두발언에서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으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

해 의심사례에 대해서 수사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세청은 아파트 증여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경찰청은 전국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해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월러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약속드린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화 시키고,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성 기자

## 지역 소상공인 현실 진단·생태계 조성 필요성 공론화 | 전북 소상공인 동행 포럼

전북의 지역경제 중심축이자 일상 속 골목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정책 포럼이 열렸다.

16일, 오후 2시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골목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성, 전북 소상공인 동행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경기 침체와 대형 유통·온라인 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현실을 진단하고, 중앙 중심 정책을 넘어 지역 맞춤형 지원과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 인사에서는 김동구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과 박명웅 전북발전커뮤니티포럼 회장이 차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골목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성, 전북 소상공인 동행 포럼’이 열렸다.

레로 나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기조 강연에서는 박현준 한국은행 전북본부 과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실

물경제 동향 및 분석을 주제로 지역 경제지표와 흐름을 짚었으며, 김성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장은 전북 소상공인 생태계 혁신과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또 권

순표 (유)사각사각 대표는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실적 문제와 정책 제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정토론에서는 국주영은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의회, 행정, 기관, 기업 관계자와 함께 심층 논의를 이어갔다. 도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와 재정 확대 방안을,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는 금융 지원 및 상권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는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 과제를 제안했고, 전주상공회의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 비즈니스 사례를 공유하며 협력적 생태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영유아 건강검진 참여율 ‘절반’

무료검진에도 수검률 55%... 검진기관 부족 심각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한 국가 건강검진 참여율이 해마다 줄고 있으며, 특히 생후 첫 검진(1차)을 받은 아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0년 83%에서 지난해 79%

로 하락했다. 그중 1차 검진 수검률은 55.9%로, 신생아 2명 중 1명은 무료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았다.

검진기관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 건강검진 지정기관 3,793곳 중 영유아 검진을 시행하는 곳은 1,665곳(43.9%)에 불과했다. 인천(35.6%), 대구(38.0%), 경기(40.9%) 등은 특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올해 검진을 받은 영유아 110만7,838명 중 10명 중 2명이 ‘주의’ 또는 ‘정밀평가 필요’ 판정을 받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호 기자

## 늘어나는 경찰관 비위... 제 역할 못하는 시민감찰위원회

작년 경찰 징계 건수 536건... 시민감찰위, 회의조차 안열어 · 경찰청 반부패 대책도 ‘호지부지’

경찰관 비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만든 시민감찰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찰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 486건 △2024년 536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시민감찰위원회는 회의조차 거의 열리지 않았다. 2021년 22건이던 회의 개최 건수는 2024년 15건, 2025년



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굵목·항응수수, 공금 횡령, 성비위 등 주요 사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심의 건수는 △2021년 24건에서 △2024

년 6건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7건의 대상 사건 중 단 한 건도 심의되지 않았다.

경찰청의 반부패 대책도 호지부지됐다. 2020년 출범한 반부패협의회의는 2022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고, ‘시민청문관 제도’ 역시 2020년 274명에서 올해 61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부터 3년 연속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하며 청렴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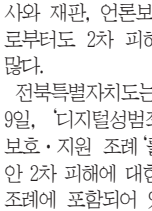
##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예방·피해자 지원

서난이 도의원, 관련 조례 개정 추진키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서 의원은 “불법촬영이나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주변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 언론보도, 심지어 수사관들로부터도 심각한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차 피해를 범죄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정책적으로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다. 2차 가해자로는 주변 지인, 모르는 사람, 가족이 대부분이었으나 수



사와 재관, 언론보도 등 각종 기관들로부터도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12월 9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그동안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와 사업 등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끝으로 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는 거의 필수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개선,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신속한 예방조치, 2차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경험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0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16일 2025년도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1건의 안건심사와 2025년 업무실적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햇빛연계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박경태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 및 수요 중심 교육시설 운영 개선 요구’ 건의안과 ‘군산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 및 수요 중심 교육시설 운영 개선 요구’ 건의안,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부지 사용 강제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

이연화 의원은 이날 시장질문을 통해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회계문제, 동물복지 침해, 행정감독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집중 질의하며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대응 방안, 향후 제도 개선 계획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부안수산업협동조합  
www.buansuhyup.co.kr

부안수협이 모든 수산물 제품은  
**100% 국산**만을 사용합니다.

특허받은 뽕잎기술!

뽕잎간고등어

뽕잎으로 절여 비린내가 전혀없는 뽕잎간고등어!

뽕잎간고등어가 맛있는 이유

- 겨울철 참 고등어만 사용해 씹는맛이 다릅니다.
- 특허받은 뽕잎절임기술을 사용하여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가 없습니다.
-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가시를 발라내어 조리하기 편리합니다.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시설공정으로 생산, 더욱 믿을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우수식품제조업체 인증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획득!**

부안수산업협동조합  
www.buansuhyup.co.kr

● 뽕잎고등어 공정

가시제거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시설공정 → 금속검출 → 포장 → 판매

전국택배판매 063-584-3101~2